

#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가시화

### 전대 29일까지 취합·내달 1일 제출 등 결정...조대는 15% '내달 수업' 차질 전망 속 대학병원엔 군의관 추가 배치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유연 처리' 방침을 발표했음에도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해당 대학들은 늦어도 오는 4월 중 의대 수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학사 일정 차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대학병원 환자 및 보호자들도 진료 및 수술에 문제가 생길까 불안해하고 있다.

25일 전남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 결과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학동 캠퍼스, 화순 캠퍼스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취합한 뒤 4월1일 다시 한 번 회의를 열어 대학 본부에 제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남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22일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교수 273명 중 2

57명이 참여해 이중 215명(83.7%)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데 동의했다.

조선대 의대는 교수 161명 중 15%가량이 사직서를 교수평의회에 제출했다. 취합된 교수들의 사직서를 대학 본부에 제출하는 날짜는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선대 비대위는 지난 주말 설문조사를 추진, 129명이 참여한 가운데 78%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겠다고 답했다.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휴학에 이어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되자

조선대 측은 의대 수업 일정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측은 "앞서 오는 4월 초 수업 개시를 예정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수업을 하기로 공지했는데도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학사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남대도 오는 4월15일부터 의대 수업을 재개하기로 공지했지만 담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대는 "다음 달 15일 수업을 재개한다고 교수들에게 공지했다"며 "아직 논의는 없지만 상황을 봐서 추가 연장을 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전국 수련병원에 공중보건학과 군의관을 추가 투입했다.

전남대병원에는 앞서 8명의 공중보건·군의관이 파견된데 이어 군의관 2명이 추가 배치됐고, 조선대병원에도 군의관 4명이 배치돼 내부 교육을 거친 뒤 오는 27일부터 진료에 투입될 예정이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교수들이 집단사직을 하더라도 당장 진료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긴급 수술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교수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전남대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60대 환자의 자녀는 "아버지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이가 담당 교수인데, 사직을 하면 향후 치료는 어떻게 되는 것"이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아버지를 모시고 응급실을 찾은 자녀도 "환자들의 고통과 위중한 상황, 보호자들의 무너지는 마음을 의사들이 안다면 이럴 순 없는 것이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기수화·김다미 기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평가 및 기자회견담회가 25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렸다. /김에리 기자

## “구속 피하는 법, 말해주면 적어서 전달”

### 사건 브로커 성씨, '수사 편의' 제공 전직 경무관 재판서 증언

'사건 브로커'가 공소 사실을 부인한 전직 경무관이 어떤 방법으로 가상자산 투자사기범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했는지 낱낱이 증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순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A(60)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사건 브로커 성모(63·구속기소)로부터 4천만원을 받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 받고 있던 가상자산 투자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에 대한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재판에서 A씨는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했으나,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씨는 "수사 정보를 들은 유일한 창구"라고 못박으며 유착관계를 밝혔다.

A씨 개입 전, 탁씨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한 채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구속을 피하기 어렵겠다는 진단에 성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성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씨에게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 받고 있던 가상자산 투자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에 대한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금전적 혐의"를 마친 뒤

성씨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수사 상황 및 구속 회피법 등을 들은 성씨는 "이를 받아 적은 뒤 탁씨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하며 "실제로도 효과가 좋았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을 부인한 A씨와는 완전히 상반된 성씨의 증언에 대한 증거로 검찰은 탁씨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받았던 2022년 9·12월 이들의 통화 기록을 제시했는데, 이 시기 전·후 연락이 별로 없던 것과 달리 수차례 통화가 오간 것은 수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6일 진행된다. /안재영 기자

## “부실 넘어선 왜곡...폐기·비공개도 고려해야”

### 市·시의회·기념재단·민변·오월단체 등 '조사위 보고서 평가' 내용 충돌 균·경 피해 파장 우려...불능 사안 추가 조치 필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개별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광주·전남지역 각계각층에서 부실 조사를 지적하며 내용 충돌이 있는 군·경 피해의 경우 종합보고서에 담겨 공개될 시 왜곡의 단초가 될 수 있어 폐기 및 비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광주시, 광주시의회, 5·18기념재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오월정신건강기법시도민대책위원회는 25일 공동 주관으로 5·18조사위보고서 평가 및 기자회견담회를 열었다. 기자회견 발표는 김정호 민변 광주전

남지부 5·18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박경섭 5·18기념재단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자문위원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권용운 일병" 사망에 대해 2022년 9월14일 광주고등법원에서 '계엄군 장갑차의 후진으로 무한케도에 깔렸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운전한 장갑차에 들이받혀 죽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조사관의 개인적 판단이 '군·경 피해 보고서'에 담겨 있다"며 "이는 객관적인 사법부의 판결보다 후퇴한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권용운

일병' 관련 내용은 '군에 의한 발포 행위 및 책임 소재' 결과 보고서에도 담겨 있지만, '군·경 피해'와는 기술된 게 달라 서로 충돌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두 발표자는 물론,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군·경 피해 보고서가 종합보고서에 담긴 후 함께 공개될 시 왜곡의 단초가 될 수 있어 폐기 및 비공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불능 결정이 난 직권조사 사안에 대해선 추가 조치가 당연히 필요하며, '불능' 표현이 '없었던 사실'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5·18기념재단 등은 이날 오간 의견이 진조위 종합보고서 권고사항에 담길 수 있도록 종합, 전달할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

### '스토킹' 혐의 같아도 처벌 각각...'불안감·공포심' 유발 쟁점

'스토킹' 혐의로 각각 법정에서 선의자들의 유·무죄가 '불안감·공포심' 유발 인정 및 증명 여부에 따라 갈렸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5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약 2년간 98회에 걸쳐 B(60대·여)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내부를 들여다 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A씨는 B씨가 집 밖으로 나오면 뒤를 따라가거나, 문 앞에 자신의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행위를 총 11차례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해 B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다른 법정에 선 60대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2022년 3·5월 세 차례에 걸쳐 전 부인 D씨의 집 때문에 쪽지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돼 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C(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14년 이혼한 이들 부부의 두 자녀는 2020년 12월 D씨의 집으로 가기 전까지 C씨와 함께 살았다.

이후 D씨는 2021년 11월 광주가정법원에 C씨가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냈으나 기각됐다.

그 사이 C씨는 자신과 떨어져 산 자녀와 연락하며 용돈도 보내줬으나 2022년 3월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D씨의 집에 쪽지를 썼다.

판단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때 해당되며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단기간에 수차례 이뤄진 것에 불과할 경우 아니라고 봤다.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됐으나, 쪽지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해코지를 하겠다는 이를 암시하는 말이 없는 점, 전달된 형태나 방식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재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 안전기원제 고사
- ▶ 시 제 상
- ▶ 제 사 상
- ▶ 고 사 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외식산업(주) 출장부패